

## 유지·보수 재량권과 예산도 없어

# 정책지원등 제도개선

어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민·수협·정부가 합심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어민들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업의 터전이란 인식을  
잊지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김동술

〈부안수협 조합장〉

어항은 어민들에게 집과 같은 존재이다. 태풍이나 폭풍, 기타 여러가지 기상재해로부터 어민의 재산인 선박을 보호해 주고, 출어와 귀항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편안히 쉴 장소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곳이라 한다면 틀림없겠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어항의 관리측면을 보면 어민의 한 사람인 나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로 불만족스럽고, 또한 부끄러운 사례가 많아 지극히 유감이다.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어항을 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어민은 그리 많지 않

은 것 같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바로 우리 수협이 실제적 관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어민의 입장에서는 어항이 자기의 집과 같은 존재인데도 그동안 마치 사글세집이나 남의 집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를 이용해옴으로써 어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되어 왔던 것이다.

내가 소속한 부안수협 관내에는 격포항이 있다. 1985년 수산청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꾸준히 개발을 계속해 온 덕분에 이제는 거대한 위용을 과시하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격포항을 가보면 어항이 어촌 지역사회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과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조그마한 어촌이 본격적인 제1종 어항으로 개발됨으로써 이제는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나아가 서해안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격포항은 변산반도 도립공원에 속해 있어 많은 관광 자원이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어업외 소득도 적지않게 올릴 수 있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어민들에게는 생활의 중요한 터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중요한 터전이 이용하는 어민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어항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한데 있다. 물론 수협 역시 이 점에 관해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어항관리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이를 어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책임은 어쨌든 전적으로 수협 자신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수협 역시 다른 수협과 마찬가지로 격포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외래어선에 대해 수시로 엠프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어항 정화의 날을 잡아 항내 오물이라든지, 무단 점유물, 임의 부설물을 제거하거나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민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이같은 추상적인 관리형태나 일종의 전시행정으로는 어항관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항관리가 부실해서 애써 어획해 온 수산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가 결국 어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관점에서 어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수협이 어항관리를 대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항옆에는 수협이 있고, 어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또한 조합원인 어민이기

때문에 수협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다.

유지·보수를 위한 재량권이 없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협이 관리를 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본격적인 관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항간에서는 어항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활용, 어항의 관리·유지에 활용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듯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에 동의를 하나 실제 집행에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산업이 다른 1차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자칫 영세어민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근본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주도 아래 어항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와 설사 실시된다 해도 그 여력이 어항관리에까지 미칠지 의문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어항을 관리할만한 조직을 갖춘 단체가 수협이외는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항관리의 주체는 수협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논리인데 재량권도, 예산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항을 관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어항관리를 위한 현장교육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서 어항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왜 이같은 보다 전문화된 어항관리가 필요한가 하면 어항이 용실태가 특정 어항으로의 이용 편중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어획물 유통이나 소비, 기능시설, 교통 등 비교적 제반여건이 잘 갖추어진 어항은 크게 붐비고 있는데 반해 일부 어항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까닭이다.

말하자면 어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어항관리 측면에서 이런 점을 고려, 합리적 투자나 이용에 관한 조정을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어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어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민·수협·정부가 합심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어민들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생업의 터전이란 인식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협 역시 이에 관한 다방면의 실제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여기에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어항은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